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선수들 '인권' 얘기하면 처벌받아

권종오 SBS NEWS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파업 선언... "설립 취지 사라진 지 오래"

정형근, 배정호, 박대현 SPOTV NEWS 기자

특별기고

스포츠기본법 2월 11일 시행... 전국민 스포츠 향유할 권리 규정

이장호 스포츠미래포럼 사무총장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끼리 '성폭행 사건' 맞고소, 사이클 유명 교수는 비리로 구속... 휘청이는 한국체대

박동희 스포츠춘추 기자

대한체육회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대선후보 초청 말이나 되나

조준우 무예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 '인권' 얘기하면 처벌받아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참여한 외교 사안인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로 거론했다가는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관계부의 양쉬 부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올림픽 정신과 맞닿은 모든 표현은 보호받을 것"이라면서도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 입국비자이자 선수촌과 경기장 출입증으로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AD카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처벌 사례를 들었습니다.

BBC 방송은 중국 관리의 발언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인권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리핑 이후에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폐회식 등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잇단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과 서방국의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보호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들어 중국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합니다. IOC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기자 회견 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적용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시상대에서 정치적 항의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IOC의 이런 완화 방침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유효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스키 선수 노아 호프먼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민키 워든 사무국장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감시당하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는 제약될 것"이라면서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근대 올림픽 시대에 전례 없는 일이며 진짜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베이징올림픽 기간 조직위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보안성이 떨어져 개인 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있다며 임시 휴대전화와 임시 전자 메일 사용을 당부하는 등 베이징올림픽은 경기 외적인 사유로 개막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 개막해 20일 끝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파업 선언... “설립 취지 사라진 지 오래”

체육계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스포츠윤리센터분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포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노조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체육계 내부의 수많은 폭력·성폭력 사태의 증언과 폭로 이후 만들어진 스포츠윤리센터 노동자의 마음은 참담하다"며 "스포츠윤리센터 내외부적 문제가 끊어가는 과정에서 원래의 설립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고 최숙현 사망 사건 이후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일원화해 2020년 8월 출범했다. 체육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당시 '채용 비리' 논란을 빚은 인물들이 고위직을 꺾자 조직 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이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체육인만 늘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출범 3년째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도 채용 비리 논란은 그칠 기미가 없다. 부정 채용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의 측근 발탁을 위해 공채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노조는 "초대 이사장 사퇴 이후 지난해 3월 황희 문체부 장관의 센터 방문 이후에 정상화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고 않았다"며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은 다른 유관기관 대비 75% 수준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A사무국장의 경우 스포츠 인권 및 체육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고위 간부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무국장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내부감시, 최근 불거진 사무국장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센터 구성원 간 내부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확충과 기관 대비 임금 차이 해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현 사태를 불러온 센터 경영진에 대한 감사 및 경영진 교체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별기고] 스포츠기본법 2월 11일 시행... 전국민 스포츠 향유할 권리 규정

스포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스포츠기본법'이 2021년 8월10일 제정되어 2022년 2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에 관한 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10여개의 주요 법률이 있었다.

스포츠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아쉬워한 학계 및 스포츠계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위 법률에 따라 그동안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규정한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또한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칭하고 있다(제4조).

이제 스포츠의 가치는 단순히 교육적 의미에서 체육이라는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을 명문화한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은 국민이 스포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면서 스포츠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문광부 대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 정책 총괄

이를 위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스포츠정책의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 스포츠인력양성, 선수 등의 은퇴후 지원, 스포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스포츠윤리, 스포츠안전관리, 스포츠환경보호, 스포츠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스포츠국제교류 및 협력, 스포츠남북교류 및 협력, 스포츠기부문화의 조성,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주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각종 스포츠관련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음 장 계속

위와 같은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앞으로의 스포츠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1983년 개정당시부터 그 목적에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을 부가하였고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올림픽을 계기로 엘리트선수들의 메달확보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하여 일반학생의 스포츠접근성을 강화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엘리트선수의 육성에 방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선수의 성적을 우선시하면서 학습권침해나 선수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고 세계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스포츠강국이 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스포츠의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11개 부처에 흩어진 스포츠정책의 통일성과 계속성 유지 기능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틀,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스포츠권 보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다양한 스포츠정책이 발굴될 것이다.

우선 국가 스포츠정책의 결정구조가 바뀐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정책을 결정하였으나 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스포츠정책이 수립되므로 교육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고 정책의 통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엘리트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넘어서 스포츠를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도 다양해질 것이고 스포츠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반으로 하므로 윤리적이어야 하며 한편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9일 스포츠미래포럼(상임대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에서는 창립총회와 겸해 손석정 대한체육회 교수정책자문단 위원장의 '정부 체육조직 재조직화 방안, 국가체육위원회 설치'란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손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1국 1협력관 6과의 체제로는 스포츠 개념 및 영역 확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형 신개념의 혁신화된 스포츠 조직 체계, 그리고 국가 스포츠 정책 총괄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조직 내에 의결 심의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한 국가스포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을 분리해 스포츠부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3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스포츠정책에 관한 다양한 공약이 수립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스포츠예산의 증대, 지방체육의 발전, 체육시설의 접근성 강화,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자자체 지원확대 등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주요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들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있어야겠다. 국민이 스포츠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스포츠기본법의 시행을 대환영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스포츠선진국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미래포럼

스포츠 분야의 미래를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복지, 문화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스포츠 전문가 64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태선 블랙야크회장이 상임대표, 박주한 서울여대교수, 조정호 한체대 교수, 이재구 삼육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상임이사에 전정임 다이빙 국제심판, 임봉우 단국대교수, 주종미 호서대교수, 이용호 서울대교수, 이경숙 한체대교수, 박지영 여성스포츠회 부회장, 이지윤 변호사가 선임됐다.

감사로는 육현철 한체대교수, 송정두 한국등산학교교장을 선출하였다. 자문위원으로 이이재 전 국회의원, 장영철 전 대한당구연맹회장,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오진학 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정태화 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양재완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초빙됐다.



필자 이장호
변호사(케이앤코 법률사무소)
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현 스포츠미래포럼 사무총장

교수끼리 '성폭행 사건' 맞고소, 사이클 유명 교수는 비리로 구속... 휘청이는 한국체대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벌어진 '유명 교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한국체대 유명 교수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중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 교수를 고소했다"며 "가해자 교수는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극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맞고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목할 건 그 다음이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폭행 방조자'로 지목했던 모 교수를 추가로 고소하고, 이 교수는 피해자의 심리상담을 맡아줬던 모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교수들 간 치열한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교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해자 교수 고소, 가해 교수는 성폭행 전면 부인

한국체대 '유명 교수 성폭행 사건'은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한국체대 소속의 A 씨가 같은 학교 C 교수를 찾아갔다. A 씨는 상담심리 전문가인 C 교수에게 "한국체대 B 교수가 날 성폭행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상담 과정에서 "B 교수가 학계에서 원체 유명하고, 학내 위치도 굳건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C 교수는 수십 명의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C 교수에 따르면 '공개적 주의 차원'의 발언이었다.

현장에 있던 학교 관계자는 "갑자기 C 교수가 에둘러 교수 성폭행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순간 듣고 있던 교수들이 '무슨 말이지?'하고 어리둥절해 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려던 C 교수의 의도와는 달리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돼 버리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회상했다.

A 씨의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한국체대는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지목한 B 교수와 함께 D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D 교수가 성폭행을 방조했다"는 게 문제 제기의 이유였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교내 인권센터에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 학교에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장 계속

실제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B 교수는 지난해 10월 중순 스포츠춘추 취재진에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되레 B 교수는 “내가 피해자다.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라며 피해자를 향해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바로 고발하면 된다. 왜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피해자로부터 ‘방조자’로 지목받았던 D 교수는 “B 교수,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서 나는 집으로 갔다. 이후 상황은 전혀 모른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며 “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국체대 사이클 관련 교수, 몇 번의 비리 혐의에도 건재하다가 최근 또 다시 비리에 휘말려 구속. 폐교 각오한 대대적 혁신 없다면 한국체대는 한국 체육의 최대 문제아로 전락할 것“



스포츠춘추 취재 결과 가해자 B 교수도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고소된 D 교수도 피해자를 상담했던 C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아는 체육계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해 교수는 정상적으로 강의를 계속했고, 반대로 피해자는 학교에 오지 못한 채 재택근무를 했다”며 “몇몇 학계 인사가 스스럼없이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고, 비아냥 대는 걸 보면서 '교수 사회가 이 정도인데 일반 사회는 얼마나 2차 가해가 횡행할까' 싶어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모 대학 체육학교 교수는 “한국체대 사이클 관련 교수가 몇 번의 비리 혐의에도 건재하다가 최근 또 다시 비리에 휘말려 전격 구속됐다”며 다음과 같이 한국체대를 일갈했다.

“한국체대는 말이 국립대고, 한국 체육의 중심이지, 솔직하게 말해 국립대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교수들 간 고소전이 벌어졌다는 얘길 들었을 때 '한국체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생각을 한 건 나만이 아닐 거다. 폐교를 각오한 대대적 혁신이 없다면 한국체대는 조만간 한국 체육의 최대 문제아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대선후보 초청 말이나 되나

대한체육회가 오는 25일 유력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체육 발전 비전을 듣는다.

이날 행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체육인이 바란다'라는 적나라한 제목을 가진 책자의 발간 보고회도 겸한다고 한다. 행사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도 문제이다.

대한체육회가 이 행사를 왜 나서서하는지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 지금 대선은 40여일 정도가 남았다. 후보들이 체육계 인사들을 찾아 몸을 낮추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내 놓아야 할 시기다.

이러한 때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의견수렴을 빙자해 초청행사를 벌이는 것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익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분노도 크다. 대한체육회의 지원 부족으로 사라진 체육단체도 많다.

정부의 예산으로 62개 정회원 종목 단체와 7개 준회원 단체를 지원, 관리 감독하는 대한체육회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방대한 조직의 운영에 눈코 뜰 새가 없을 대한체육회장이 대선 후보를 모실 한가로운 처지인지 묻고 싶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체육계 사건 사고들이 대한체육회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들로 보고 있는 모양새이다.

대선 후보 초청행사가 체육계 발전이나 지원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너무나도 뻔하다. 이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제발 소외된 일선체육인과 단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장은 정히 예비 당선자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다면, 여의도로 직접 가거나 당선 후 청와대에 노크를 해야 할 것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포항시, 도민 체육대회 상징물 디자인 논의 본격 나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0_0001732072&cID=10810&pID=10800

광양제철소, 지역 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적극 지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96431&code=61121111&cp=nv>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새싹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1058000007?input=1195m>

"코로나인데 돈 왜 더 받아"...체육시설 난동 50대男, 1심 벌금형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1_0001732693&cID=10201&pID=10200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놀라운 미래(The Amazing Future)'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8_0001728405&cID=14001&pID=14000

장애인체육회, 24일 훈련 개시식...베이징패럴림픽 선전 다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044000007?input=1195m>

대한체육회, 베이징 올림픽 기간 국가대표 활용한 불법 마케팅 단속

<https://www.news1.kr/articles/?4560736>

'체육부 합숙 금지 등'... 전북도, 시·군에 특별방역 조치 요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9_0001730073&cID=10808&pID=108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